

G-Welfare Weekly Report

01

중앙정부 정책동향

1. 복지부,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매뉴얼 배포

01 주요 내용

-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'06년부터 모든 지자체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, 각 지자체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중기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
 - 최초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인 제1기(2007~2010) 계획을 시작으로 '10년 제2기(2011~2014), '14년 제3기(2015~2018) 계획이 수립되었으며, 현재 제3기 3차년도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
- 제3기 계획 시행 중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*되면서, 새로 수립될 연차별 계획에 사회복지영역 확대, 지역사회보장지표 도입 등의 정책적 변화가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
-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~11일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교육을 실시하고,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을 배포**
 - 복지부는 17년도 시행계획이 중기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되,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변화 요소가 명확히 반영·안착되도록 수립할 것을 요구
 - 2016년에 비해 2017년 연차별 계획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
 - ① 지역사회보장 영역 확대에 따라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 등 신규 사회보장분야 사업을 확대
 - ②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자체별 차별화된 노력 가시화
 - ③ 되도록 자체 수립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지표를 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역사회보장지표로 변경
 - ④ 모니터링, 평가를 구분해서 사업추진과정을 체계화
 - ⑤ 광역 시도의 경우 시군구간 균형발전 지원 등 시군구 계획과 차별화된 내용 제시
- 또한 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 수준과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55개를 제시(여건지표 36개, 영향지표 19개)하여 지역차원의 지표관리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

*15년 7월 개정

**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주요 내용

02 경기도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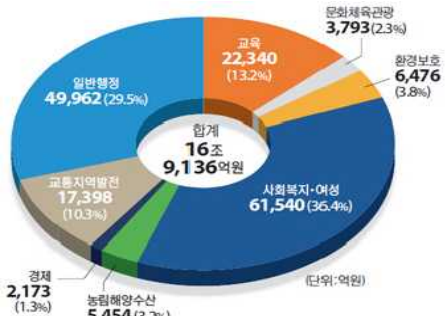
-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있어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역할 정립 필요하며, 이는 도내 시군의 계획수립 지원과 시군간 균형발전 지원에 초점
 - 지난 10년간 진행되어온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형식적이거나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했으며,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
 - 시군차원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표설정과 지표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 지원 필요
 -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경기도 복지균형발전지원센터(가칭)를 설치, 시군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의 메카로 활용
- 또한 중기계획이 연차별 시행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,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도 차원의 비전 마련, 계획수립을 위한 각종 실태조사(수요·공급조사 등) 필요
 - 사전에 시군과 협력해 경기도 복지 비전이 반영된 중기계획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

2. 경기도 2017 복지예산 5조2,957억 원, 전체 예산의 31.3%

01 주요 내용

- 지난달 31일 경기도가 16조9,136억 원* 규모의 2017년 경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도의회에 제출
 - 도는 "내년 예산안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·안전·균형발전·복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, 4대 도정목표**와 2기 연정에 대한 예산이 적극 반영했다"고 발표
 -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액은 일자리 1조3,508억 원(8.0%), 안전 1조7,420억 원(7.5%), 균형발전 1조7,420억 원(10.3%), 복지 5조2,957억 원(31.3%)이며
 - 복지예산은 '16년 예산안에 비해 약 7천억 원 감소
 - 2017년 예산안 중 일자리 4,479억 원, 안전 5,959억 원, 균형발전 5,957억 원이 올해 예산안 대비 증가한 반면, 복지 분야는 6,989억 원이 감소
- * 2016년 예산안 : 일자리 9,029억 · 안전 1조1,463억 · 균형발전 1조2,408억 · 복지 5조9,946억
- ※ 2016년 예산안 : 일자리 9,029억 · 안전 1조1,463억 · 균형발전 1조2,408억 · 복지 5조9,946억

[그림] 2017년도 경기도 예산편성안***



분야	예산액	비율
합계	16조 9,136억 원	100%
사회복지·여성	61,540	36.4%
일반행정	49,962	29.5%
교육	22,340	13.2%
균형발전	17,398	10.3%
안전	17,398	10.3%
농림해양수산	5,454	3.2%
경제	2,173	1.3%
문화체육관광	3,793	2.3%
환경보호	6,476	3.8%
- *** 경기일보 2016.10.31.
- 도는 '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'를 위한 복지예산에 기초생활보장 9,782억 원,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강화에 3조5,104억 원 등을 편성
 -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세부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1조5,801억 원, 노인 복지를 위한 기초연금·월동난방비 및 장기요양시설 급여 지원 등에 1조4,495억 원 편성
 - 또한 청년층 주거지원사업(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차지원) 예산 10억 원을 최초로 편성
 - 내년도 복지 분야 예산안 비중은 총예산의 31.3%로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, 예산액은 전년 복지예산안 대비 13.2% 감소
 - 한편 2기 연정을 기반으로 한 연정예산은 지난해(9,647억) 대비 두 배 규모인 1조8,481억 원이 반영되었으며, 보건복지위 소관 예산은 775억 원(16건)이 반영
 - 연정예산은 당초 요구액(2조2,239억)의 83.1%인 1조8,481억이 반영되었으며 보건복지위 소관 예산의 경우 당초 요구액(841억, 17건)의 92.2%가 반영
 - 경기도가 발표한 예산안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개별 상임위,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예결위의 심의 이후 내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

02 시사점

-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,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
 - 최근 교육부가 내년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(5,356억)을 삭감하면서, "도 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(5,459억)을 편성하지 않는 한 내년 예산을 교부할 수 없다"고 발표
 - 누리과정 예산이 도 예산에는 편성(5,459억)된 반면, 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여전히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황
- 또한 2017년도 예산안 수립을 위해 경기도가 실시한 재정사업 평가 결과, 일몰사업으로 결정된 40개 사업 중 복지 관련 사업이 13개(33%)로 가장 많음
 - 이 중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은 6개(42.7%)****로, 이들 사업은 경기도가 시군의 복지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해당
 - 복지사업의 발전 맥락을 고려한 재정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전문가 참여 필요

*일반회계 기준

**잘사는 경기도, 안전한 경기도,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,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

*** 경기일보 2016.10.31.

****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, 노인·장애인복지관 운영비,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,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,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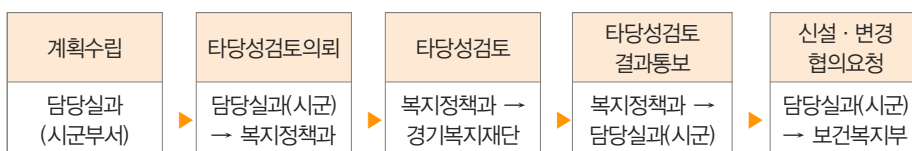
02 사도/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1.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관련 도 차원 컨설팅 추진

경기도가 10월부터 도내 실국 또는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조정 단계 이전에 도 차원의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원활한 협의조정 과정을 지원키로 함

-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(제26조)
 - 협의제의 대상이 민간자원으로만 시행되는 제도, 사회보장 시설·단체의 개설,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, 대상자 증가 및 재정분담비율 변경으로 인한 변화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고,
 - 지방교부세법 시행령(제12조)에서 지자체가 정부와 협의·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제도의 법적 구속력이 상당
- '13년 시행 이후 매년 협의 대상이 증가하는 가운데, 지자체의 경우 '동의' 비율은 감소하고 '보완'이나 '부동의' 비율은 증가(동의 비율 '13년 80.7% → '16년(7월) 39.1%)*
 - 경기도는 신설·변경에 대한 협의결과 총 97건 중 8건이 변경보완 후 동의, 16건이 부동의로 나타났으며**, 특히 시군 단위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·조정 추진과정에 한계를 경험
 - 지자체에 대한 변경보완 및 부동의 건은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한편 협의대상에 적용되는 경우이나 그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사례 역시 다수 존재
 -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사업의 변경도 협의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, 타 유관부서에서 협의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존재
 - 실제 보건복지부는 '16년 10월 경기도와 시군에 신설변경대상이지만 협의하지 않은 사업 100여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음
- '보완', '부동의', '미협의' 등의 경우 해당 복지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함을 고려, 원만한 협의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사전적이고 전략적인 노력 필요
- 이에 경기도는 10월부터 경기도와 시군의 사회보장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추진하고, 경기복지재단 내에 '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컨설팅단'을 구성
 - 타당성검토(사전컨설팅)은 각 실국 및 시군에서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, 검토기간은 10일~20일 이내로 진행될 예정임
 -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협의를 위한 사업의 중복여부, 사업의 타당성, 협의신청 서식의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
- 실제 타당성 검토는 계획 수립(해당 실과) → 컨설팅 의뢰(도 복지정책과) → 타당성 검토(경기복지재단) → 결과통보(도 복지정책과) → 협의요청(해당 실과) 순으로 진행

〈표〉 경기도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협의 사전타당성검토 추진절차***



- 경기도차원의 신설·변경협의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과 연계 필요
 - 또한 사업특성상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도와 재단 차원에서 간담회 등을 지원

*본지 65호 참조

**'14년~'16년 7월 사이 협의결과임

***타당성 의뢰 이후 2주 이내 회신

03 FACT CHECK

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,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나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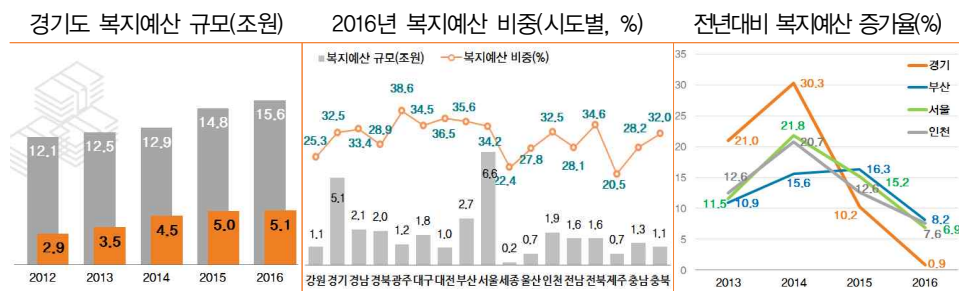
- 각 지자체는 '15년부터 지방재정법 제5조2항에 따라 <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>는 주요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*
 - 계획(20점), 관리(30점), 성과환류(50점) 단계로 구분하여 11개 지표 사용하며, '우수' 이상 사업비율 20%이내, '미흡' 이하 사업비율 10%이상 선정 의무화
 - (절차) 평가계획수립 → 사업부서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 →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하며, 필요 시 전문기관의 지원 및 현장 실사 병행 실시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투자사업의 경우 5억 이상의 사업, 행사성 사업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사업이 평가의 대상
 - 다만,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제외
ex)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의무지출사업,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
- 사업별 5단계**로 평가결과가 산출되며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%이상 삭감 원칙 적용,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
 - 보건복지국 소관 일몰사업으로 선정된 6개 사업(42.7억)의 경우 자체평가 결과 모두 90점 이상으로 '매우 우수'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일몰사업으로 결정
- 향후 재정사업 평가 시 '미흡' 이하에 대해서는 '10% 삭감→차년도 재평가→재평가결과에 따른 일몰 결정' 단계로 진행하는 등 재정평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

*국가는 2005년부터 재정사업 자율 평가 제도 시행 중 지자체는 2015년부터 시작

**매우우수-우수-보통-미흡-매우미흡

04 통계로 보는 복지

복지예산의 규모와 변화(2012-2016)*



자료: 2016 재정공시, 각 시군

- 경기도 세출예산(일반회계) 규모가 지난 '12년 12조393억원에서 '16년 15조5,723억원으로 약 29% 증가하는 동안 복지예산 규모는 약 75% 증가
 - 경기도 복지예산 규모는 '12년 2조8,852억원에서 '14년까지 4조5,460억원으로 대폭 증가
- 올해 시도별 복지예산 비중을 보면, 광주가 38.6%로 가장 높고 제주가 20.5%로 가장 낮으며, 경기도는 32.5%로 17개 시도 중 9번째 수준
 - 2016년 복지예산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(6.6조), 그 다음이 경기(5.1조)임
- 시도별 복지예산 증가율**은 전체적으로 '14년에 대폭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며, 경기도는 수도권의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복지예산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둔화

*본예산 총계 기준(일반회계)

**전년대비 복지예산